

## 2015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중 여성관련 정책 현황

2015년은 국정과제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해로, 지난 1월 17부 5처 5위원회 3청, 총 30개 기관의 정부 부처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음. 이 중 20여개 기관이 여성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보고에 포함하고 있음.

20개 부처청이 업무보고에 포함한 주요 여성관련 정책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포함하는 일·가정 양립 정책,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, 여성의 경력 단절 완화, 보육지원, 폭력 근절을 포함하는 인권 보호,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지원, 건강 및 안전 증진으로 요약할 수 있음.<sup>1)</sup>

- 일·가정 양립 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, 행정자치부, 인사혁신처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, 여성가족부는 육아휴직 이용자의 복귀 지원 관련 업무를 강조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보고하였음.
-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, 기획재정부, 문화체육관광부가 확대 방안을 보고하였고, 통계청은 2015년 2회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작성 및 공표를 보고하였음.
- 여성의 경력단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,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경력복귀 지원을 보고하였음.
- 보육 지원 방안으로 기획재정부가 취업모 중심 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을, 고용노동부 국방부,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각 직장어린이집, 군 어린이집, 농촌 보육지원 확대를 보고하였음.
-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, 법무부, 보건복지부가 성폭력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 및 처벌 강화 대책을 보고하였음.
- 한부모 및 결혼이민자 관련 지원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기초생활지원과 자녀양육지원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, 통계청은 2016년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을 예정하고 있음.
- 보건복지부가 암 검진 확대를,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,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경호르몬 관리 강화를 보고하였음. 안전에서 여성은 취약계층으로 접근되어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교육 및 위해요소 진단을 보고하였음.
- 이 밖에, 인사혁신처, 법제처,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·출산·양육·취업 관련 정보 제공 또는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, 통일부와 외교부는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모자보건사업 확대를 보고하였음.



1) 다음 장의 각 부처 여성관련 주요 정책은 정부 국정과제별로 요약·정리하였음

## 기획재정부

기획재정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,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〈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〉

☑ 취업모 중심 보육지원체계 개편방안 마련

〈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〉

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

☑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 등을 통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

## 미래창조과학부

미래창조과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〈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〉

☑ 여성 과학기술인 인력양성 및 활용

•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복귀 지속 지원 (114명)

•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·훈련(1,100여명) 강화 (경력관리, 리더십 함양 등)



## 교육부

교육부 여성관련 정책은 창의교육 분야의 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,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있음

### 창의교육

〈100세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〉

☑ 경력단절여성 대상 지자체·대학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제2의 경력 창출 지원

### 국민안전

〈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〉

☑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

• 성범죄 형(刑)·치료감호 확정자를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하여 교단에서 원천 배제 (15. 상·교육공무원법·국회 제출)

•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은 직위해제 조치하여 학생과 즉각 격리

• 교육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 기준을 다른 직종의 공무원 대비 강화(성폭행, 성추행 관련 사항은 최소 중징계 처리)

## 외교부

외교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〈행복한 임신과 출산〉

☑ 모자 보건사업을 국제기구와 연계하여 지원

## 통일부

통일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〈행복한 임신과 출산〉

- ☑ 개성공단 호혜적 협력 거점 사업으로 발전(산업부, 복지부, 국토부와 협업)
  - 영유아 산모 통합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확대
  - 국내 민간단체를 활용, 마을 단위로 영양, 보건 의료, 생활개선 등 통합 지원
  - WEP, WHO, UNICEF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병행
  - 모자보건 분야(탁아소 확충, 의료보건 확대) 등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

## 법무부

법무부 여성관련 정책은 국민안전 분야의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있음

### 국민 안전

#### 〈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〉

- ☑ 아동학대·성폭력 범죄 대응강화
  - 24시간 전자발찌 위험경보 대응을 위한 '전자감독 신속대응팀' 확대
  - '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' 개발 본격화
  - 성폭력·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



## 국방부

국방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〈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〉

- ☑ 군인자녀 보육여건 개선, 군어린이집(24), 공동육아나눔터(7)

## 행정자치부

행정자치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,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,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정책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〈행복한 임신과 출산〉

- ☑ 육아휴직 시 업무대행 지정,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대체인력 활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활성화
- ☑ 남성 육아휴직기간 확대(1년→3년), 업무대행수당(월 5만원) 인상 추진 등

#### 〈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〉

- ☑ 유아보육·교육 정보 통합서비스 제공
  - 보육통합정보시스템(복지부), 어린이교육마당(교육부) 등 7개 시스템에 대한 협업 서비스 시행 추진

#### 〈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〉

- ☑ 유연근무제 유형 통합·단순화(7개→4개) 등 자기주도 근무여건 조성

### 기타

- ☑ 생애주기별 안전교육
  -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정부 안전종합대책 추진

## 문화체육관광부

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,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여학생 선호 운동 프로그램 확대 등 여성건강과 관련한 정책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<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>

- 이주여성,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원(5개)

#### <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>

- 시간제일자리 확대
  - '이야기 할머니 사업' 확대(할머니 2,100명을 6,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, 유아 36만 명 수혜)

### 기타

- 여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(요가, 피트니스, 피구, 치어리딩, 탁구 등, 850개→1,000개) 및 여자어린이 축구클럽 육성(30개→48개) 확대

## 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식품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<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>

- 2030세대 등 젊은 층을 겨냥한 보육서비스 제공
  - 공동아이돌봄센터 및 이동식놀이교실(34개소), 주말 돌봄방(15개소) 등



## 보건복지부

보건복지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,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,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, 행복한 임신과 출산,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이 있으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<건강한 가정 만들기>

-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('14, 연 84만원→'15, 연 120만원)
  - 미혼 한부모가 실제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강화

#### <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>

-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 패키지 보급 및 취업지원 강화
- 위기노출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상담인력 대상 인권보호 폭력대응 교육 확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증설
- 다문화가정 자녀 중 중도입국 학생 등의 초기적응 지원 및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, 레인보우스쿨 확대

#### <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>

- 보육교사 양성체계(3급 과정, 사이버 학점은행 등) 강화, 인적성 검사 의무화, 근무환경 개선

#### <행복한 임신과 출산>

- 의료비 걱정 없이 임신 출산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
- 여성 및 고위험군 암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암 검진 확대

#### <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>

-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(처벌 강화)
  - 아동학대 발생 즉시 해당시설 폐쇄 및 학대행위자 자격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학대 교사 원장 영구퇴출
  - 신고포상금 강화 등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, 어린이집 아동학대 특별점검 추진(경찰청 협조)
  -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모의 CCTV 영상 열람권 제도화, 정보공시 강화(학대예방 교육, CCTV 설치 등)
  - 평가인증 부모참여를 강화하고 지표에 아동학대 예방 항목 확대 및 아동학대 안전인증제 도입(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보급)

## 기타

### ☑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

-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(17만명 → 463만명)에 대해 추후납부 허용 및 분할납부 확대(최장 24개월 → 60개월)
- ※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('15.2월)

## 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,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으며 여성 종사업종 안전 보건능력 강화 정책이 있음

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 <행복한 임신과 출산>

#### ☑ 여성 계속 일하기 지원 확대

- 육아휴직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휴직 복귀 후 지급 비율 확대('15.7월)
- 아빠의 달 지원,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 및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한 부모 공동 육아휴직 활성화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, 최대 2년) 및 사용횟수(최대 3회) 확대('15.1. 관련법 개정)
- 출산육아기 여성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재고용지원금 상향
- 고운맘 카드 가입자 중심으로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임신 출산 단계부터 모성보호 관련 지원제도 홍보

### <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>

#### ☑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구축

-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해소를 위한 규율 대상 확대(사업주→사용자 등) 및 사업장 감독 및 민간 상담협업 강화(고용평등상담실 지정 확대 등)
- 자치단체 협업모델 활성화를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(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'15년 20개소 확충 목표)
- 적극적 고용개선조치(Affirmative Action) 활용도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질적 측면 반영, 적용대상 확대 등 추진
-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스마트워크 활성화 방안 마련(관계부처 합동)

#### ☑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

- 간호·은행업 중심으로 신규채용 확대 및 우수사례 발굴
- 시간선택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채용 확대, 공공부문 콜센터 우수사례 확산, 기관별 대표 직무 선정 적용 등(공공부문이 선도)
- 대기업·중견기업, 공무원 중심으로 전일제 → 시간선택제 전환 본격 지원 확산
- 기존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 시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방안 마련·시행('15년 기간제 시간제 → 무기계약 시간제 전환 시 임금 일부 지원)
- 시간선택제 운영매뉴얼 제작 보급 및 업무공백 보충을 위한 대체인력뱅크 확대
- 시간선택제 활용 우수기업에 정책자금, 공공조달 등 우대방안 시행
- 가족친화기업 인증, 일자리 창출 유공자 포상 선정 시 우대(여성가족부 협력)

## 기타

#### ☑ 안전보건 대응능력 강화

- 여성 3대 업종(교육서비스업,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, 건물 등 종합관리업) 건강증진·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보급

## 법제처

법제처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,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이 있음

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 <건강한 가정 만들기>(다문화가족가족 적응지원 강화)

- ☑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(장애인, 노인, 한부모 가정 등)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확대
- ☑ 다문화가정, 북한이탈주민, 한부모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생활법령교육 실시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관련 정책은 건강과 관련한 주부 대상 HACCP 바로알기 교육 실시, 임신부 대상 환경호르몬 사용 관리 강화 등이 있음

### 기타

- ☑ 주부 등을 대상으로 HACCP 바로알기 교육 실시
- ☑ 의료제품 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관리 강화
- ☑ 의료기기(성형 미용 제품 등),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강화
- ☑ 임신부 생식기 장애 등을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사용 관리 강화

## 국민안전처

국민안전처 여성관련 정책은 여성, 노인 등의 취약계층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 있음

### 기타

- ☑ 여성 등 취약계층 안전위해요소에 대한 선제적 진단·개선  
· 어린이, 노인, 여성에 대한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, 민·관 합동으로 교통법규 위반과 개학기 안전위해요소 단속

## 중소기업청

중소기업청 여성관련 정책은 창조경제 분야의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등이 있음

### 창조경제

#### 〈중소기업성장희망사다리구축〉

- ☑ 투자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'여성기업 및 지방기업 전용 투자펀드' 운용규모 확대 (여성기업 : '14) 100 → '15) 170억원)
- ☑ 위장 여성기업 공공조달시장 참여 방지를 위해, 여성기업 범위개편 및 위장 여성기업 제재근거 마련 ('15.6, 여성기업법 개정)

## 인사혁신처

인사혁신처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분야의 행복한 임신과 출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〈행복한 임신과 출산〉

- ☑ 생애주기별 국민맞춤서비스 제공  
· (임신·출생) 임신확인 시 무료건강검진, 출산용품 지원 등 통합 안내
- ☑ 창업·육아·생활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확대
- ☑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 
· 집중형 근무 및 회의시간 단축 등 자기주도형 근무 정착 및, 아빠 육아휴직과 대체인력 활용을 활성화 하여 가족이 있는 삶 실현

## 국민권익위원회

국민권익위원회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,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〈건강한 가정 만들기〉

- ☑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(한부모 가정 등)에게 필요한 법령정보를 찾아주는 원스톱 생활 법령정보 서비스 실시

#### 〈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〉

- ☑ 외국인·결혼이민자 등의 공직임용을 통해 사회 정착 지원, 소속감 고취 및 사회구성원의 공직대표성 강화



## 통계청

통계청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·복지 분야의 건강한 가정 만들기, 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 있음

### 맞춤형 고용·복지

#### <건강한 가정 만들기>

##### ☑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

- 등록센서스 추진을 위해 만든 인구·가구 DB를 활용한 양육 미혼모 통계작성 제공('16.9월)

#### <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>

##### ☑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 작성 및 공표

- 시간제 근로자 고용안정성, 자발성 및 근로조건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통계 작성·제공('15. 5월, 11월)

## 여성가족부

여성가족부 여성관련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 분야와 국민안전 등 여러 부문에 걸쳐 있음

### 맞춤형 고용복지

#### <건강한 가정 만들기>

##### ☑ 한부모가족 등 양육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
-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
-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및 자립 지원 강화

#### <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>

##### ☑ 다문화가족 단계별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

- 위기노출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
-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효율화를 위한 총괄·조정
-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문화 인식 개선 추진

#### <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>

##### ☑ 가정·지역사회 양육지원 강화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

#### <여성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>

##### ☑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및 재취업 활성화

-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및 복귀 지원

-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 연계

- 취업지원 서비스 질 제고 및 이용 활성화

- 취업 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지원
- 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전후 연구개발(R&D)지원으로 창조경제 확산(중기청 협업)
- 일자리 지원기관 간 협업으로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- 정책모니터링 실시로 현장 목소리 반영

- 가족친화지수를 일가정양립 중심 지표로 개선, 동아시아 적용가능한 「가족친화 국제지표」 개발 및 국제적 확산

- 생활밀착형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「워킹맘, 워킹대디 지원센터」 운영

##### ☑ 양성평등 윤리 문화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내실화

-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『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』 수정(워킹맘·워킹대디의 일가정양립지원 강화 등)

-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

- 여성 사회적 지위 반기별 향상도 측정(30대여성 고용률, 전문직 여성비율 등)

- 정책의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활성화

- 양성평등 문화 확산

- 「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테스크포스」 운영 활성화

- 「양성평등 주간」 운영

- 대중매체 양성평등 인식 확산(방송 및 보도 분야 대상 양성평등상 시상 등)

-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

- 「여성인재 아카데미」 운영을 통한 조직역량 강화

- 여성인재 확충 및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

- 제15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개최, 유엔안보리 결의 1325 국가행동계획 수립·이행화

### 국민안전

#### <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>

##### ☑ 폭력 예방체계 강화

- 폭력 예방교육 내실화

- 온오프라인 아동·청소년 성보호 기반 구축

- 폭력 근절을 위한 법·제도 집행력 및 처벌 강화

##### ☑ 폭력피해자 지원 내실화

- 인프라 개편·확대로 신속·편리한 지원

- 3개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'해바라기 센터'로 일원화
-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
- 피해자 자립 기반 확대
- 군대 및 대학의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성화
  - 교재 및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·보급, 전문 강사풀 제공, 교육 컨설팅 지원 등

## 기타

- ▣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
  -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
  - 위안부 피해자 건강지원

- ▣ 정부 부처의 여성관련 정책은 2014년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세부직종을 명시하고 있으며 유형별 맞춤형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개발·운영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을 제안하고 있음. 또한, 2015년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및 남성의 육아휴직 관련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.

- ▣ 돌봄 지원과 관련하여 2014년 시간제 보육, 초등 1·2학년 돌봄 서비스 등을 주요 업무 보고에 포함하였지만, 2015년에는 취업모 육아지원 이외에도 어린이 집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대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고 있음. 또한, 2014년과 다르게 안전 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어 성폭력, 가정폭력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안전 위해요소 개선 및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여짐. 이 밖에 미혼 한부모 기초생활보장,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 확대 및 국제적 공감대 확산, 여성 암 검진 확대,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납부제도 변경, 여학생 생활체육프로그램 확산, 군대 및 대학 성범죄 예방 등 그간 성 평등 정책 확산과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현안이 부처의 주요 업무로 추진될 예정임.

- ▣ 특히, 2015년은 여성정책의 근간이었던 「여성발전기본법」이 「양성평등기본법」으로 개정되어(7월 1일 시행)시행되는 「양성평등기본법」의 원년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기대해 봄.



▶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경